

“친노 중심 폐쇄적 선거운동, 安에게 충격”

■ 안측근들 비망록 ‘안철수는 왜?’ 출간

“2012년으로 돌아가 文과 단일화 결렬되면 대권 포기 안해”

“지난 7·30재보선 공천 전까지 권은희 의원 접촉한 일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 측근 인사들이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7일 대선 비망록을 출간한다. 비망록에는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을 직접 정조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어 향후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안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한 결정적 계기가 됐던 7·30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뒷이야기도 담겨져 있어 당내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강동호 뉴딜정치연구소장, 강연재 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오는 7일 대담집 ‘안철수는 왜?’를 출간한다.

이들은 대담집을 통해 안 전 대표가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공천 전까지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과 전혀 접촉한 일이 없다고 밝

했다.

당시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권 의원의 전략공천을 놓고 안 전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셈이다.

재보선 당시 새정치연합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한 강 변호사는 이 책에서 “제가 공금에서 직접 공천을 주신 것이나, 권은희 후보와 사전에 인연이 있던 사이냐고 물어봤더니 안 전 대표도 ‘권 후보를 공천장과 운동화를 줄 때 처음 봤다’고 했다. 둘 사이에 어떤 교감도 없었고 사전에 인사도 한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전 대표가 권 후보의 광주 전략공천에 반대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안 전 대표가 권 후보 전략공천을 내놓은 건 아니라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들이 오는 7일 발간할 예정인 대담집 ‘안철수는 왜?’ 표지.

표가 “나는 이런 식의 단일화는 명분도 없고 표에서 효과도 없다고 본다. 총선이 아닌 재보선에라도 야권 단일화의 벽을 한 번 넘어봐야 한다”라며 반대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강 소장은 “단일화 과정에서 문 후보에 대해

서울 동작동에 기동민 전 정부부시장을 전략공천한 것과 관련해서도 “안 전 대표는 공천에 대해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먼저 낼 사람이 아니고, 원칙론적인 선당후사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기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도 안 전 대표가 “

심지어 안 전 대표가 출마 포기 후 지역 포럼에서의 비공개 대화에서 “민주당과 함께 뭔가를 한다든지, 민주당과 같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강 소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2·8 전당대회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기만 대변인은 “안 전 대표 측근들의 책에 관해 일일 대응을 안기로 했다”며 “문 후보도 (책 출간에 대해) 듣기만 했고 일일 말이 없었다”고 밝혔다.

마음 깊이 쌓인 무언가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 또 단일화가 결렬된다면 대선 출마를 포기할 것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적어도 최근에 들은 바로는 안철수의 대답은 ‘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도 “사퇴한 후보임에도 안철수가 가는 장소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이상 현상이 한동안 이어졌는데, 마지막 선거유세가 이런 열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안철수가 또 한 번 실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연단에 오르려던 순간 펼쳐진 친노 중심의 폐쇄적인 선거운동 풍경을 안철수에게겐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포기 후 지역 포럼에서의 비공개 대화에서 “민주당과 함께 뭔가를 한다든지, 민주당과 같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강 소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2·8 전당대회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기만 대변인은 “안 전 대표 측근들의 책에 관해 일일 대응을 안기로 했다”며 “문 후보도 (책 출간에 대해) 듣기만 했고 일일 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8 전당대회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기만 대변인은 “안 전 대표 측근들의 책에 관해 일일 대응을 안기로 했다”며 “문 후보도 (책 출간에 대해) 듣기만 했고 일일 말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빠르면 2월 중 열릴 듯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추진중인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업무협약 시행 검토의견’을 확정했다. 시의회는 이번 주중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확정된 인사청문회업무협약 시행검토의견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된 뒤 광주시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인사청문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인사청문대상 기관으로 제시한 4개 공사·공단(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김대중센터·환경공단) 외에 광주발전연구원, 비엔날레재단, 디자인센터, 신용보증재단, 빛고을 노인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10곳을 포함해 총 14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검증범위는 기관장의 능력 검증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가치관, 공직관을 포함시켰고, 인사청문회 운영방법은 해당 사안별로 한시적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위 인원은 9명으로, 해당 기관의 성격과 소관 상임위원회를 고려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에서는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4개 공사·공단으로 한정하고 있고, 검증범위도 능력검증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시와 시의회간 향후 협의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 주장대로 공사·공단만 적용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청문회부터 이뤄질 수도 있지만, 시의회가 출연기관장까지 확대하자고 버틸 경우 협의는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시 일각에선 운영현 광주시장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만큼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와 시의회간 협의에 따라 일부 출자·출연기관도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경남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향후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대상 기관을 조정할 수 있지만, 시민 혈세인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일부 출자·출연기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與 “비선 농단, 허위 자작극” vs 野 “면죄부 수사...특검 불가피”

檢 ‘정윤희 문건’ 수사결과 공방

여야가 5일 대통령 측근의 국정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희 문건’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상반된 평가 속에 특검 도입 공방을 벌이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당은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허위 자작극으로 판명됐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야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한 채 문건 유출 연루자만 처벌하겠다는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면죄부 주기’라고 비난하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국은 온통 흔들렸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조승원 주연, 박관천 조연’의 허위 자작극으로 결론났다”며 “야당이 또다시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은 실제 없는 의혹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습관성 구태 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서면논평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유기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와는 정윤희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건의 동기와 결과는 못 밝히고



새정치민주연합 유윤근(오른쪽)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특검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과정만 처벌하겠다고 나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특검에서 전부 뒤집힐 것”이라며 “여당도 더 이상 특검에 반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유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제시한 대로 허명수사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건에 나

은 국정농단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며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2라운드로 가려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권정당 되려면 국민에 희망 줘야”

민주정책연구원 “경제 메시지 너무 비판적”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 메시지가 지나치게 비판적인 탓에 수권정당의 리더십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불임정당’의 수동성과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나왔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5일 펴낸 ‘수권정당을 위하여-중산층 정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민은 자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만 당의 메시지는 비판적”이라며 “수권정당이 되려면 희망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쓴 이진복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무능은 비판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잠재력은 낙관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경제의 힘과 국민이 직면한 압박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들어 ‘무조건 비판만 하는 야당’의 이미지를 탈피해 건전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자를 적대시하는 ‘부자 대 서민’의 제로섬 게임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통합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치’는 정치협조를 활용해 정치를 행정화하고 있다”며 “정치불신을 가속화하는 정치의 ‘행정화’와 ‘시민운동화’의 그릇된 좌우 편향을 거부하고 조용한 생활인의 꿈을 대변하는 ‘정치 정상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